광명시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김윤희 의원이 추진 중인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66조의2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8. 28.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6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9월 2일(일) 12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5,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chaos96@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의사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5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3

-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
..... 6

-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

-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5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 의 일 자 : 2018년 8월 23일
발 의 의 원 : 김운호 의원
찬 성 의 원 : 박덕수·제창록·박성
민·이형덕 의원

1. 제안이유

-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2018년 8월 22일)으로 국·과의 변경 및 조직이 신설·개편됨에 따라,
-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정비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조정(안 제3조제2항제1호가목)
-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조정(안 제3조제2항제2호가목)

3. 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8. 8. 28. ~ 2018. 9. 2.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기타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철도정책실, 고용경제국, 자치행정국”을 “정책개발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재정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경제문화국, 사회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환경수도사업소, 건설지원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제2항제3호다목 중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을 “의회 관련 조례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김윤호 (2680-2538)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 (생략)</p> <p>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자치행정교육위원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철도정책실, 고용경제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하부행정기관에 속하는 사항</p> <p>2. 복지문화건설위원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시민안전국, 복지돌봄국, 시민행복국,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환경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삭제</p> <p>3. 운영위원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 style="padding-left: 20px;">다. <u>회의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u></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정책개발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재정국</u>-----</p> <p style="padding-left: 20px;">-----</p> <p style="padding-left: 20px;">-----</p> <p style="padding-left: 20px;">--</p> <p style="padding-left: 20px;">나. -----</p> <p>2.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경제문화국, 사회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환경수도사업소, 건설지원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3.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p> <p style="padding-left: 20px;">나. -----</p> <p style="padding-left: 20px;">다. <u>의회 관련 조례 및</u> -----</p> <p style="padding-left: 20px;">-----</p>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18년 8월 22일

발의의원 : 이형덕 의원

찬성의원 : 제창록·박덕수·한주원·
이일규·조미수 의원

1. 제안이유

-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광명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목적(안 제1조)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선정,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주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제5조)
-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제7조)
-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회의운영,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 제11조)
- 회의 출석 등에 따른 수당 및 여비 지급, 재원확보·사용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 제13조)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추진단 설치에 관하여 규정(안 제14조)
- 비밀엄수,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5조 ~ 제1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18. 8. 28. ~ 2018. 9. 2.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공동 번영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범위 및 선정)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 및 시민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간에 공동 번영을 위해 시 특성에 맞게 선정하여야 한다.

② 협력사업의 선정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중에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시장은 협력사업을 직접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협력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방안
3.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지원
4.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승인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한 광명시의회의원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제척·기피 및 회피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품위 손상이나 회의 장기 불참으로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재원확보 및 위탁사업비 지원) 시장은 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제5조에 따른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실무 추진단) ① 시장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실무 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② 실무 추진단은 사업과 관련된 시 소속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5조(비밀엄수) 위원 및 협력사업 추진 등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준용) 협력사업,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6582)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①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2.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 의 일 자 : 2018년 8월 22일

발 의 의 원 : 이주희 의원

찬 성 의 원 : 김윤호·이형덕·조미수·박덕수
제창록·박성민·현충열·한주원

1. 제안이유

- 최근 몇 년 사이 미세먼지의 강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미세먼지가 재난수준으로 시민의 실생활에 다가오고 있고,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발생, 사망사고, 가축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재난으로 인식하지 못해 효율적인 관리 및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미세먼지와 폭염을 자연재난의 범위에 포함시켜 재난 및 안전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광명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와 폭염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2조)

3. 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8. 8. 28. ~ 2018. 9. 2.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불 입
- 기타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따른다**”를 “**따르며, 자연재난에 미세먼지와 폭염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09)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u>따른다.</u></p>	<p>제2조(정의) ----- ----- ----- ----- <u>따르며,</u> <u>자연재난에 미세먼지와 폭염을 포함한다.</u></p>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 의 일 자 : 2018년 8월 22일

발 의 의 원 : 김운호 의원

찬 성 의 원 : 현충열·이주희·이형덕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함에 따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모범운전자, 모범운전자회 등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나. 모범운전자회의 임무 명시(안 제3조)
- 다.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규정(안 제5조)
- 라. 지원예산의 사용 감독 및 평가(안 제6조)
- 마. 모범운전자회 및 회원의 포상 규정 명시(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8. 8. 28. ~ 2018. 9. 2.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불 입
-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광명시 지역발전과 선진교통 질서 확립을 위한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높이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광명시 경찰서 산하 지회를 말한다.

제3조(임무) 모범운전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도로상의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2. 광명시가 주관하는 행사와 관련한 주변 도로의 주정차 관리 및 차량소통 등 교통정리 활동
3. 법에서 규정한 경찰업무 지원 및 협조
4.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4조(조직 구성) 모범운전자회의 조직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모범운전자회에서 내부 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피복비, 순찰장비 구입비
2. 차량구입비와 차량운행 시 사고, 상해 등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비
3. 사기를 높이기 위한 연찬회, 체육대회 등 행사성 경비
4.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강화 교육
5. 법 제5조의3에 따라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광명경찰서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제3조에서 규정한 활동 실적이 3개월 이상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장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모범운전자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연 1회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시장은 광명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법에서 정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민으로부터 미담 등 모범적인 모범운전자회 회원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이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도시교통과
입안자	의원 김윤호 (2680-2538)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 의 일 자 : 2018년 8월 27일

발 의 의 원 : 김연우 의원

찬 성 의 원 : 김윤호·이주희·박성민·제창록·
한주원·이일규·박덕수 의원

1. 제안이유

-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출범했던 1기 대책위가 2018년 4월로 임기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2기 대책위의 출범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서 보다 바람직하고 건설적인 대책위가 될 수 있도록 민주적 주민자치를 강화하며 적법운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대책위의 기능을 특별관리지역 관련 사안으로 한정함(안 제2조)
- 나. 대책위 상임대표는 특별관리지역 주민 대표로 위촉함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주성과 주민대표성을 강화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 다. 대책위 상임대표의 선출 방식을 주민스스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상임대표의 정당성을 명확하게 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라. 대책위 위원(상임대표 포함)의 임기를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안정적 운영이 되도록 함
- 마. 대책위가 위원 전체 회의로 운영되지 않고 사실상 거의 대부분 집행위원회를 통해 운영되었던 1기 대책위의 운영실태를 거울삼아 집행위원회의 주민대표성(상임대표가 의장을 맡되 특별관리지역 각 취약지구 마을 대표들의 의결로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간접대표성을 충분히 보장)을 강화함(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8. 8. 28. ~ 2018. 9. 2.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사항”을 “특별관리지역 관련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상임대표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을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 중 “발전”을 “발전, 도시개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상임대표는 특별관리지역 내 취약지구(환지방식 도시개발 지구로 지정된 지구) 마을 별 토지주 또는 주민의 대표들이 선출한 연합 대표를 시장이 위촉한다. 특별 관리지역 취약지구 주민단체(연합체)의 구성방식 등은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집행위원장이”를 “공동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집행위원회는 상임대표 및 특별관리지역 내 각 취약지구별 1인 이상씩의 주민 대표를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여 상임대표가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의결권은 각 취약지구대표들에 한해 취약지구별 1표씩 행사하는 것으로 한다.
- ④ 집행위원장은 상임대표가 겸하며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고 집행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스마트도시과
입안자	의원 김연우 (2680-250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기능)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6. (생략)</p> <p>7. 그 밖의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대책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사항</u>의 추진</p>	<p>제2조(기능)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 ----- <u>특별관리지역 관련 사항</u>-----</p>
<p>제3조(구성 등) ① 대책위원회는 상임대표 1명을 포함하여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u>시장</u>이 위촉한다.</p> <p>1. (생략)</p> <p>2. 집단취락 및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 소재 토지주, 거주자 또는 <u>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u></p> <p>3. <u>시에서 활동 중인</u> <u>각급 단체장</u> 또는 <u>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u></p> <p>4. 시 미래 발전에 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p> <p>② <u>상임대표는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대책위원회의 추천을 거</u></p>	<p>제3조(구성 등) ① ----- ----- ----- ----- <u>상임대표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u>-----.</p> <p>1. (현행과 같음)</p> <p>2. ----- ----- <u>등</u></p> <p><u><삭 제></u></p> <p>3. ----- <u>발전, 도시개발 등</u>----- -----</p> <p>② <u>상임대표는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지구(환지방식 도시개발 지구로 지정된 지구) 마을 별 토지주 또는</u></p>

쳐 시장이 위촉한다.

③·④ (생략)

제4조(임기) ① 대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조(상임대표의 직무) ① (생략)

② 상임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집행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집행위원회) ① (생략)

② 집행위원회는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집행위원은 상임대표가 지명하고,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에서 호선한다.

<신설>

<신설>

③·④ (생략)

주민의 대표들이 선출한 연합 대표를 시장이 위촉한다. 특별관리지역 취약지구 주민단체(연합체)의 구성 방식 등은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4조(임기) ① -----
--- 3년-----.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상임대표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동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

제8조(집행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집행위원회는 상임대표 및 특별관리지역 내 각 취약지구별 1인 이상씩의 주민대표를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여 상임대표가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③ 의결권은 각 취약지구대표들에 한해 취약지구별 1표씩 행사하는 것으로 한다.

④ 집행위원장은 상임대표가 겸하며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고 집행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18년 8월 22일

발의의원 : 한주원 의원

찬성의원 : 이주희·박덕수·현충열·
이일규·이형덕 의원

1. 제안이유

-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방안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시장, 시민,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 정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 다.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각종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관계부서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바. 대기측정망의 설치·운영 및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활용·홍보에 관한 사항과 일일 미세먼지 측정데이터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18. 8. 28. ~ 2018. 9. 2.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피해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
 -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에 필요한 시설, 장비(분석 또는 시료채취)를 갖춘 한 개 이상의 측정소의 모임을 말한다.
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사업
6. 환경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일일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시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환경관리과
입안자	의원 한주원 (2680-2542)

□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 ④ (생략)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판매·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工程)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사용 및 폐기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와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환경관리체제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발표)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도 예측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 관련 기관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예측·발표의 기준 및 내용 등 대기오염도의 예측·발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①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 ④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 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
2.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 변화 현황 및 전망
3.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 3의2. 대기오염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도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위해수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3의3.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측정 및 감시·관찰에 관한 사항
 - 3의4.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4. 환경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5.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의 구축
7.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조화와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